

보도설명자료

('20. 5. 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비대면·디지털
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

(조선일보 5.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는 지난 4.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보고된 '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'에 따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공부문 비대면·디지털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◇ 5월 6일자 조선일보 < 文대통령 디지털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 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 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한국형 뉴딜 일자리(10만개 비대면·디지털일자리)를 4일만에 급조하면서, 산하기관에 비대면·디지털이 아닌 풀뽑기 등도 포함시키도록 지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·폐업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실직자들을 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
- 10만개 공공부문 비대면·디지털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4.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된 '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'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이 적은 분야 또는 디지

텔·IT 분야 중심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며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한국형 뉴딜과는 관련 없음

< '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' 내용 >

3.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(55만명, +3.6조원)

【공공부문】

① **비대면·디지털 정부일자리 (+10만명, +1조원)**

- (분야)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(부처별 수요 파악)
- (조건) 주 15~40시간 근로,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최대 6개월)

□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비대면·디지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제할당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요청한 바 있으며

-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디지털화, 온라인 콘텐츠 확충 등 비대면·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6,000여개의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였고, 세부사업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

※ 문의: 산업일자리혁신과 나성화 과장/권태성 사무관 (044-203-4220)